

집주인도 몰라...광주 '유령 거주' 수도륙

거주불명자 해마다 1000여명 증가 8835명 달해 빛·수배 피하려 몰래 전입신고...범죄 악용 우려도

“낯선 사람의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배달된다면 ‘거주 불명자’에 의해 주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 몰래 자신의 주소를 옮겨놓는 이른바 ‘대포 주소’(거주 불명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대포 주소’는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지만 자치구나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나서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거주 불명자’는 지난 2010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주소’ 제도가 ‘거주 불명등록’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시행됐다.

13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지역 ‘거주 불명자’ 신규 등록자 수는 지난 2013년 1157명, 2014년 1140명, 지난해 1133명으로 해마다 1100여명이 추가되고 있다.

‘거주 불명자’로 등록될 경우 당장은 국민건강보험 이용과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재등록을 통해 ‘거주 불명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형편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재등록이나 사유서 제출이 없이 장기간 ‘거주 불명자’로 남아 있는 이들이다. 지난해 말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거주 불명자’는 동구 1614명(1315세대), 서

구 1667명(1515세대), 남구 1487명(1338세대), 북구 2451명(2247세대), 광산구 1616명(1468세대) 등 모두 8835명(7883세대)에 이른다.

9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치구나 주민센터 등에 전입 신고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경찰은 ‘장기간 거주 불명자’ 중 상당수가 범죄나 불법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포 주소를 이용해 경찰 수배나 수사, 채권 추심, 세금 납부 독촉 등을 피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자들 대부분은 대포 주소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주소지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잠적하는 사기 사건도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집 주인도 모르는 사람과 관련된 독촉장 등 우편물이 배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구와 주민센터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장기간 거주 불명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만 ‘거주 불명자’ 등록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 체계적 관리가 힘든 상황이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사람이 나타나 주소지를 확인해 줄 때까지는 현황 파악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13일)를 앞두고 15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 일제정리 기간 가구명부와 실제 거주자를 대조해 전입신고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 최고장

발부나 공고 등을 통해 ‘거주 불명자’로 등록한다. ‘거주 불명자’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도 실적위주 무리한 감사 규탄”

전남개발공사 노조 前 간부 무죄 판결 관련 성명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이 전남도의 수사의뢰로 인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前) 간부들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13일 “전남도의 실적위주 무리한 감사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남개발공사 사가 비리의 온상이고 무리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실추됐고, 담당 직원과 그 가족은 1년 6개월여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기업 노조가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대해 이처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노조는 “지금까지 쌓아온 두 기관(전남도-전남개발공사)의 신뢰에도 균열이 발생했다”며 “전남도는 무죄 판결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남도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진술한 사과를 해야 하며 차후의 전남도 감사는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를 위해 대관소탈(大觀小察) 자세로 정책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2014년 오랑지구 택지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해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전모씨와 개발본부장을 지낸 또 다른 전모씨에 대해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이들을 배임혐의를 기소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7일 “책임감리를 외부 업체에 발주한 것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영성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무리한 수사의뢰, 기소였다는 지적을 낳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향소이유서 제출기한 전

선고한 판결은 위법

대법, 광주지법으로 환송

향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기 전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향소이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승합차를 들이받고 피해차량 주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5월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 역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지난해 10월7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고, 같은 날 두 번째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강씨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구두변론을 거쳐 같은 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통지서를 보낸 지 15일 만이었다.

강씨 측이 두 번째 사건의 향소이유서를 내긴 했지만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라고만 적었고 구체적 이유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향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향소이유서에 의해 심판하는 것이므로 향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해 재판에 마친 것은 향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3일 광주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정부의 위안부 협상 원천 무효화를 촉구하는 수요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위안부 할머니들 “한일 합의 무효...10억엔 안받는다”

피해자 6명 정부에 대책 촉구

광주 등 전국 곳곳서 수요집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나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센터와 ‘나눔의 집’ 소속 위안부 피해자 6명은 13일 서울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타결한 지난날 말 한일합의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출근 정대협 수요집회 자리를 지켜오다 건강상 이유로 한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김복동(90)·김원옥(88) 할머니와 이용수(88) 할머니가 참석했고, 나눔의 집에서는 이옥선(89)·박옥선(92)·강일출(88) 할머니가 함께 했다.

김 할머니는 “우리가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할지 몰랐다”면서 “우리는 그 돈(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억엔) 안 받는다”고 못박고, 시민사회가 준비하는 위안부 피해자 재단에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소녀상 이전·철거와 관련해서는 “소녀상은 우리 국민이 한 톨한 톨 모아 만든 역사로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도 (이전·철거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 수요집회가 열렸다. 광주민주통일정치포럼과 시민권행동 등은 이날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시민 숲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위안부 협상 원천 무효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활동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 ‘나쁜 동네 어른’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같은 동네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성폭행 신고 이후에도 한 달여간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가족과 연락을 취하는 등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지적장애 증세가 있는 10대 여학생을 성폭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씨를 지난 12일 구속했다.

A씨는 같은 마을에 살며 안면이 있는 피해 여학생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며 접근해 지난해 여름부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체증이 불어나고 복통 증세가 반복되자 피해자 가족이 함께 병원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이 아니고 신고 당시 중요한 물적 증거 등이 바로 나오지 않아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피의자의 행적 등을 조사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학생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며 접근해 지난해 여름부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체증이 불어나고 복통 증세가 반복되자 피해자 가족이 함께 병원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이 아니고 신고 당시 중요한 물적 증거 등이 바로 나오지 않아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피의자의 행적 등을 조사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지난해 147척으로 늘어

지난해 서해상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 등으로 해경에 나포된 어선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서해 EEZ에서 중국 어선 조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어선 숫자는 7만1235척으로 전년의 7만9494척보다 10%가 줄었다.

반면 불법 조업 등으로 해경에 나포된 어선 숫자는 147척으로 2014년 123척에 비해 20%가 늘었다. 나포 이유는 허가는 받았으나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EEZ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119척(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8척(19%)은 무허가 조업이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목포역·버스터미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에 대피 소동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

○13일 목포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에 목포에 사는 박모(33)씨가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내가 목포역과 목포버스터미널 물품 보관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밝히자 역과 터미널이 발각 뒤집혔다는 것.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

○13일 목포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에 목포에 사는 박모(33)씨가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내가 목포역과 목포버스터미널 물품 보관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밝히자 역과 터미널이 발각 뒤집혔다는 것. ○...승객 등 시민을 대피시킨 경찰과 군 당국은 2시간가량 수색했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자 신고 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조사한 결과 “(박씨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고 이날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는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허위 소동이라고 결론짓고 상황을 해체.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급 매”

싸고 좋은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구 7080자리
-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 ▶감정/시세-7억원정도
- ▶매매-5억6천만원
-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 ▶보5천만원에 월220만원 임대 보장
-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6층, 70평, 즉시 임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시세-1억5천만원, 매매-1억

남구, 송하동 임야

- 남구 송하동 산77번지
- 2026평, 도로에서 200m 지점
- 풍암동 대주 3차아파트 인근
- 장기투자 최적장소
- 시세-8천만원, 매매-3천 5백만원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12-4번지
- 89평,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복초 인근
- 장기투자 최적
- 시세-1천만원, 매매-500만원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시세-1억6천만원, 매매-1억1천만원

회사 사정상 급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